

마약사범, 단순처벌보다 적극적 치료개입 필요하다

SMU



최근 마약중독자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에 따른 범죄도 빈번히 발생한다. 마약사범의 다른 문제는 마약 복용 후 환각 상태에서 강도, 강간, 살인 등 2차 범죄를 일으켜 제3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이다.

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마약중독자 및 마약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마약중독자를 범죄가 아니라 공공의료 차원에서 다룰 것을 고려하고 ‘치료명령제’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 관련 연구와 중독자들의 재활을 돕는 등 최대한 역할 수행하고 있다”며 “향후 민간단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적극적인 정책개발을 통한 실질적 마약류 예방대책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성수

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동국대학 행정학과 / 동대학원 경찰행정학과
(現)한국범죄심리학회 감사
(前)보건복지가족부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
(現)충북지방경찰청 고객만족자문위원
(現)법무부 교정본부 충주구치소 교정자문위원
(現)중앙인사위원회 국가고시위원
(現)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現)한국중독범죄학회 부회장



마약사범, 사회전반에 손실 비용 발생

“마약사범 재범률이 평균 30%이상 입니다. 2015년에는 마약사범이 1만 2천여명 이었으며, 올해도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약물공급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투약사범에 대한 치료처우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보여집니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꾸준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마약범죄자가 우리사회에 끼치는 나쁜 영향은 사회적 손실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다. 2009년 보건복지부 연구에 따르면, 마약류 등 유해약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2조5천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의료복지적 비용, 형사사법적 비용, 노동생산적 비용이 포함된다. 즉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비용과 해악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공공의료 차원 치료개입 필요하다

최근 많은 연구와 보고서에 따르면, 강제적인 법으로 불법 마약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노력이 실패하고 있다. 박 교수는 마약 공급을 미리 차단하거나 마약을 유통시키는 범죄조직을 단속하는 정책이 큰 효과가 없다는 의미로 분석했다.

“최근 국제마약정책센터는 마약을 범죄가 아니라 공공의료 차원에서 다룰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마약중독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보다는 치료적 개입을 통해 중독에서 헤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들이고도 마약 중독자가 감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처벌과 치료적 개입이 적절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어느 한쪽으로부터 치우쳐 있기 때문이죠.”

박 교수는 우선 단기적으로 치료보호제의 하나인 ‘치료명령제’의 활용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마약류 중독자 단기개입 기관선정과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보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법무부 교정본부는 마약 등 약물 중독사범에 대해 ‘심리치료과’를 신설했다. 이는 마약범죄도 구속보다는 치료에 더욱 치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약물 중독범죄에 적극적이고 선제적 대책으로써 심리치료과 신설이 바람직하다”며 “중전에는 수용자에 대한 상담·심리치료가 지방교정청별로 수행됨에 따라 중독유형에 따른 전문 치료·재활 프로그램 연구·개발 및 보급에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에 기여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심리치료과’ 신설이 교정본부보다는 마약 사범의 특성을 고려해 중간처우 또는 사회내처우 중심이 되는 ‘범죄예방정책국’에 신설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마약사범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과 해결대책 필요

그동안 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수행과제, 주요논문 등에서 마약류 관련 다양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앞으로 마약중독자 및 마약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을 이끌어 내어 지역 사회중심의 치료적 접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재원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 정책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이경희 이사장 취임과 함께 새로운 이사진 구성 등 운영과 활동이 좀 더 거시적으로 바뀌어 나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해 박 교수는 “특정 전문가 중심의 활동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다학제적 연구를 통한 다양한 접근방법과 해결책을 낼 수 있는 기점을 마련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도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와 관련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였으며, 또한 마약 관련 연구와 중독자들의 재활을 돕는 등 최대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향후 민간단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적극적인 정책개발을 통한 실질적 마약류 예방대책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약중독자 및 마약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을 이끌어 내어
지역사회중심의 치료적 접근이 필요하다
